

데스크 시각

광주은행의 변화와 지역경제



최재호 경제부장

오는 5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로 기억 될 것이다. 19대 대통령 선거(5월 9일)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극도로 분열된 국민의 갈등과 상처를 감싸고 조화 시킬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리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한 자질을 갖춘 후보를 19대 대통령으로 뽑는 것, 이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목직한 사명이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비단 정치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의 총수나 최고경영자처럼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무능한 경영자는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에서 낙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극심한 산업 환경의 변화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리더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의 총수나 최고경영자에게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혁신 및 전략적 사고가 필수 요소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한(63) 광주은행장의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말 광주은행장에 부임한 그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 등을 통해 광주은행을 탈바꿈시키고 있다. 김 행장은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금융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제한적인 고객군과 전통적 영업 방식을 고집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 우선 은행권 최초로 텔러-일반직 직군 구분을 없앴다. 일반직과 텔러로 직군을 구분해 뽑던 채용 제도를 정규직 7급 동일 직군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김 한 행장의 리더십

또한 특진 제도를 통해 조직에 탄력을 부여했다. 정규직 7급 신입사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에는 통상 6년이 걸렸지만 고성과자에 대해 3년으로 단축시켰다. 5급에서 4급 승진도 9~10년 걸리던 것을 고성과자에 4~5년이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면 확실하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메시지로 구성원들에게 확실한 동기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김 행장은 지역은행의 한계를 벗어나는 역할상과 혁신적인 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했다.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이 서울·인천 등에 소형 전략점포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한 것이다. “밖에서 벌어 지역민을 위해 쓰겠다”는 전략의 실현이었다. 지난 해까지 30번째 점포를 수도권 지역에 개점했으며 수도권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공급해 소통을 트게 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연간 당기순이익이 2015년 대비 78.7% 증가한 1034억 원 을 기록했고, 총자산 27조 원(전년 대비 20.5% 증가), 영업이익 1309억 원(전년 대비 81.3% 증가)으로 자산이 크게 성장했다.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고정이하 여신비율 0.66%, 연체비율 0.59%로 전년 대비 각각 0.22%p씩 개선돼 큰 폭의 성장에도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했다. 직원들의 노고에 김 행장은 1500여 명 직원의 미국 연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2019년 또는 2020년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선진 금융문화 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 직원 해외 연수는 금융 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김 행장은 광주은행의 이익 추구뿐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단기적인 금전 기부보다 는 지역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과 후원을 통한 차별화 되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김 행장은 최근 예방광주를 위해 한국화의 미래지향적 비전

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광주화루(畫樓)공모전’도 개최했다.

변화와 혁신의 바람

사실 김 행장이 점령군(?)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가며 처음 취임했을 때 그의 지역에 대한 애환심(愛憂心)을 기대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김 행장은 “지역이 발전하고 커져야 광주은행도 같이 발전한다”는 철학이 확고했다. 김 행장은 지난해 광주은행 본점 20층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은행 20층에서 내려다보는 무등산 차경(借景)은 큰 즐거움이긴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광주은행 본사 건물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만큼 지역경제 발전이 더디다는 것을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로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김 행장은 최근 지역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해 주목을 받은 광주·전남 경제단체의 기자회견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을 보여 주기도 했다. 새롭게 선출될 19대 대통령과 함께 광주·전남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어 무등산 풍광(風光)을 가릴지언정 광주 시내에 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설 날을 기대해 본다. / lion@kwangju.co.kr

社說

간절한 기다림의 세월 이제 끝날 수 있기를

세월호 참사 1098일, 육상거처 1주일 만에 9명의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선체 수색이 시작했다.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세월호 인양에 궁극적인 목적이었기에 지금 온 국민은 가슴 졸이며 이를 지켜보고 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어제 3·4층에 모두 5곳의 구멍을 새로 뚫는 등 모두 9곳의 진입로를 확보해 지장물 제거와 수색을 이어 간다는 계획과 함께 선수 좌현 A데크부터 진입한다고 밝혔다. A데크는 세월호 선체의 4층 객실이 있는 곳으로 다른 곳에 비해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색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공개한 A데크와 B데크 사진을 보면 3년 전의 모습을 도저히 찾기 어려울 정도 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철판이 늘어져 있고, 철근이 튀어 나와 있다. 철재 벽과 기둥은 뽕뽕해 녹슬어 있

고, 객실 공간은 전체적으로 회색빛 밑으로 뒤덮여 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패널도 있어 수색 작업자들의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조사를 위한 선체 수색에 대한 이견들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미수습자 수색 방안과 유해 발굴 방법 등을 지도·감독하는 등 전면이 나서며 주요 결정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세월호 선체 수색 기간은 일단 3개월로 잡혔다.

정부는 내부 수색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신속한 작업을 통해 유가족들의 간절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진짜 사고 원인을 무엇이며 수백 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늦어져 있고, 철근이 튀어 나와 있다. 철재 벽과 기둥은 뽕뽕해 녹슬어 있

재정자립 갈수록 악화 휘청거리는 지자체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6년간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곳은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 전국 최하위 수준인 10%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광주에서 는 남구가 13.5%로, 전남 시·군에서는 구례군이 9.9%로 가장 낮았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에 기고한 논문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 분권 강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자치구의 경우 전체 재정의 절반, 시·군은 30%를 사회복지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구조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에 중앙 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

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의미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6년간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곳은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 전국 최하위 수준인 10%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남구가 13.5%로, 전남 시·군에서는 구례군이 9.9%로 가장 낮았다.

앞서 지적했지만 지방 재정이 취약해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회복지 지출 급증이 꼽힌다. 실제 지자체의 예산 가운데 2010년 전체 세출의 21.4%(38조6230억 원)였던 사회복지 부문은 2014년 26.3%(59조8809억 원)까지 늘었다. 연평균 12.7%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제 ‘사회복지의 덫’에 갇힌 지자체의 재정 습통을 열어 주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재원 재조정 방안을 도입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제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 2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6 : 4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다. 사회복지라는 국가 현안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복지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은편칼럼

행복을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텃밭



류 동 훈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문위원

지난 4월 15일에 광주 광산구에서는 ‘은누리 텃밭’(약 5000㎡)을 마련해 개장식을 했다. 동곡동 기흥저수지 옆 (하산동 365-2)에 조성한 은누리 텃밭에서는 기존 도심 텃밭과는 다르게 ‘학교’ 개념을 도입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참여자들이 홀로 터득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도를 해서 함께 배워가는 텃밭이다.

누리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 텃밭 학교에서는 농작물 재배법, 농기구 사용법, 전통놀이, 도시양봉, 텃밭 채취 일기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청과 함께 분양을 진행하여 광산구에 거주하는 66개 가족집과 지역의 11개 어린이집에서 분양했다. 지난 주말에 이 텃밭을 둘러보러 갔더니, 양쪽에 저수지가 있고, 또 옆에는 대나무 밭이 풍성하게 있어 풍광이 무척 아름다웠다. 텃밭 입구에는 주차장과 화장실, 벤치가 있어

있어 생태공원이 되었다. 텃밭과 텃논들은 모두 마을 공동체에 서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텃밭과 텃논에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 홍성에 갔더니 식당 옆에 벼를 심은 상자가 여러 개 있었다. 이게 뭐고 어디에 있냐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재배하는 있는 벼 재배 상자라는 것이다. 충남은 전략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 벼 상자 하나씩을 기르고 있었다. 벼를 키우면서 쌀의 귀함과 생명 농업의 소중함을 체득하는 것이다. 홍성에는 ‘장애인 복지 행복농장’과 ‘꿈이 자라는 땅’이라는 농장이 있는데 이곳은 정산지체 장애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힐링과 자유를 하는 곳이다. 이곳 농장에서는 비장애인들도 함께 어울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소통한다. 광주에도 이런 곳이 있다. 광산구 분량동 지동마을에 작은 규모지만 ‘로텔나무아래’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지능농장’이 있다. 장애인들이 농사짓기 편하게 텃밭은 상자모양으로 높여서 설계가 되어 있다.

필자는 요양원 근처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효도텃밭’도 도입해 보았으면 한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보고

자녀와 함께 텃밭도 가꾸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면서 텃밭에서 좋은 먹거리들을 재배하고 옆에서 도끼 밟도 주고 한다며 흥미를 가지고 더 자주 찾아 볼 것이다.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도 손주와 자녀들이 텃밭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면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 볼 것이다.

이곳 텃밭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요양원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도시 근교 농촌 마을에 마을 텃밭을 많이 만들어 도시민들이 자주 드나들며 농사를 짓는다면 농촌 마을에도 활기가 돌 것이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지역 농민들과 따로 분리되어 농사만 짓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함께 텃밭에 주면서 어울릴 수 있는 도농교류 텃밭이 되어야 도시민들도 더 정감있는 여가생활을 즐기고, 농민들과의 직거래도 이루어져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이 되어야 한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을공동체텃밭’을 소중히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더 확대하면 좋겠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문화전당을 살리는 길



박혜자 전 국회의원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호남인들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공전법’을 통과시켜 김대중의 아시아문화공전 운영을 위해 800억원을 앞으로 5년간 국고에서 퍼줘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격노했고, 유 의원은 야당의 지지를 받는 배신의 정치 행을 했다고 비난하는 이 글은 박사모 회원들 사이에 도는 카카오톡 메시지이다.(조선일보 2017. 4.3. 팩트체크팀)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시아문화공전’으로 둔갑한 아시아문화전당은 2006년 노무현정부에 의해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이 찬성해서 제정되었고 박근혜 의원도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을 통해 진실처럼 확산되어 김대중 정권을 매도하고 그 외중에 문화전당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맞서 싸웠던 필자도 온갖 욕을 먹고 있었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광주가 꿈꾸어 왔던 문화전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차근택을 통해 문화전당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만들어 눈엣가시 같은 문화전당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광주가 지난 10년 동안 꿈꾸어왔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덩그러니 건물 하나로 전략할 판이다. 우리에게 ‘개굴밥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우리에게 문화전당을 살리고 우리의 꿈을 다시 이어줄 묘책은 없는가.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문화창조융합본부는 해체되었지만 거기서 추진했던 몇 가지 사업은 살아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뺏겼던 사업을 이제 찾아와야 한다. 문화전당의 3대 기능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전시이지만 교육기능의 경우 그동안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

2016년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설립한 문화창조 아카데미는 디지털융합과 문화공공디자인, 첨단공연 전시의 3개 전공과정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적인 전문 교육기관이지만 현재로서는 추진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문화전당이 문화창조 아카데미를 가져다가 문화예술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커운다면 향후 광주가 문화수도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문화전당을 살리는 또 하나의 방안은 명실공히 아시아문화를 선도하는 국제기구화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의 대외원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싸우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개정안의 숨겨진 비책은 대외원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화전당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문화예술분야의 대외원조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제2의 유네스코로 도약할 수도 있고 광주에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아시아의 문화예술인들이 광주에 머물며 한류를 접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해 내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 이를 확산시키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문화자산이 비로소 세계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대선 테마주' (Election Theme Stocks) featuring '無等鼓' (Mueunggu) and '광고문' (Gwanggomon). It lists various companies and their stock price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Bungy@.

Advertisement for '光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